

유럽 사회민주당의 위기와 혁신 과제

이삼열,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근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2009년 9월 독일의 사민당이 23%라는 역사적으로 최하의 득표율을 기록한데 이어,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스웨덴의 사민당도 줄줄이 실권과 득표율 폭락이라는 최악의 곤경에 처해 있다.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과 노조가 등을 돌리고 탈당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당이 붕괴해 버릴 지도 모른다는 존립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제3의 길 노선을 택해 하르츠 개혁안을 만들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타협한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당 내외에서 완전히 불신을 받았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정책은 인기가 떨어져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프랑스의 조스팽 정부도 민영화 정책 등으로 인해 좌파연합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고, 스웨덴의 사민당도 신자유주의적 타협 정책에 대한 노조의 강한 반발로 친서민 정책으로 선회한 중도우파의 연합 전선에 연패하고 있다.

유럽의 사민당과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의 도전을 받으며 '제3의 길', '새로운 중도', '경쟁력 강화'의 길을 걷다가 정체성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사회 민주당이 정책과 지배 구조를 혁신하고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다렌도르프의 경고처럼 사민주의가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과 혁신의 처방들이 논의되고 있다.

2011년 3월

문제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사회민주당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의 위신이 크게 떨어져 버린 데 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사회적 개혁 정당으로 인정받아 온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최근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2009년 9월 27일 독일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이 23%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득표율로 추락하자, 이제는 대중 정당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려운 군소 정당으로 붕괴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돌았다.

바로 11년 전 1998년 9월 총선에서 슈뢰더를 총리 후보로 세운 사민당은 40.9%의 득표율로 압승하여 16년 만에 기독교민주연합(CDU, 이하 기민련)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았다. 그런데 사민당은 34.2%(1600만 표)를 얻은 2005년 9월 18일 총선보다 6백만 표를 더 잃어 998만 표(23%)에 그치고, 녹색당이 18%, 자유민주당(FDP)과 사민당에서 갈라진 좌파당(Linke)마저 각각 10% 이상을 얻어, 5개 정당이 각축을 벌이는 다당제 시대가 되자 사민당에게 몰락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사회민주당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의 위신이 크게 떨어져 버린 데 있다.

당명은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주의당, 스웨덴의 사민당 등으로 다양하나 유럽적인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강령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회민주당으로 통하고 있다.

1999~2000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15개국이었다. 이 중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11개 나라에서 정권을 잡았고 다른 두 나라에서도 연정 파트너로 내각에 참여하고 있어 사회민주당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스웨덴의 요란 페르손 등 거물급 정치 지도자들이 총리가 되어 영웅적 사회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갔다. 뿐만 아니라 토니 블레어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제3의 길'을 외치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설파하였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오늘,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27개 국가로 늘어났지만 남유럽이나 동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회민주당이 하강의 길을 걷고 있으며, 보수 우파 정당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노동자와 서민층이 당을 떠나고 선거에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마저 계속 중도 우파의 보수 정당들에게 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으며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은 크게 반성하고 있다. 독일 사민당과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그리고 스웨덴 사민당은 심각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당의 모습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해 3개월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에 머물며 독일과 유럽의 정당 관계자와 학자들을 만나 이에 관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들을 알아보았다.

1. 독일 시민당의 추락과 위기의 원인

독일에서 1863년 이래 1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대중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1959년 바드 고테스베르그 강령을 통해 '사회 정의와 평등한 인권', '연대적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 민주주의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럽의 진보 정당과 함께 세계사적인 변화를 주도해 왔다. 70년대 동방 정책(Ostpolitik)으로 동독과 화해를 이루었고, 노사 간 공동 결정과 협력 체제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만들어 낸 시민당은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당 총재였다. 당시 시민당은 유럽의 희망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정당이었다. 70/80년대 선거에서는 40% 이상의 득표 수준에서 기민련/기사련과 경쟁을 벌이며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주고받아 쌍벽을 이루었다. 1976년 총선에서는 두 당의 표를 합치면 90%에 이르러 어김 없는 양당제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3의 길'을 들고 나와 '새로운 중도'의 구호를 외치던 슈뢰더 정부는 점차 인기가 떨어져, 2005년 9월 18일 총선에서는 35.2%를 얻은 기민련에도 1%가 모자라 대 연정을 구성하면서 총리직을 앙겔라 메르켈에게 넘겨주었다.

기민련과 연정 4년 뒤에 있는 2009년 총선에서 시민당은 비참하게 패했다. 떨어져 나간 600만 표는 녹색당과 좌파당으로, 혹은 보수당으로 이전했거나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선거 결과의 분석은 시민당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전체 노동자의 24%가 시민당을 지지한데 비해, 28%가 보수적인 기민련에, 18%가 극좌파인 좌파당에 표를 던짐으로 노동자들이 떠난 정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동조합원들마저 시민당에 등을 돌려 50%가 시민당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더구나 미래의 주인공인 18세~34세의 청년층이 17%밖에 시민당을 찍지 않아 2005년보다 21%를 적게 얻는 충격적인 결과에 당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일시적인 선거의 패배는 다음에 만회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구도의 변화는 쉽게 고쳐질 수 없다. 더구나 2005년에 시민당을 탈당한 좌파

선거 결과의 분석은 시민당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전체 노동자의 24%가 시민당을 지지한데 비해, 28%가 보수적인 기민련에, 18%가 극좌파인 좌파당에 표를 던짐으로 노동자들이 떠난 정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탈당의 행렬은 특히 2004년 이후에 더욱 거세어졌다. 브란트가 총리로 있던 1970년대에는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 명을 넘었고, 슈뢰더 총리 초기만 해도 75만 명이었지만, 2009년 현재 57만 명으로 줄어 지난 10년 동안에 20만여 명이나 당을 떠난 셈이 되었다.

지도자 오스카 라퐁텐이 동독 출신 그레고르 기지의 민주사회당(PDS)과 결합하여 좌파당을 창당한 이래, 우경화한 시민당에 불만을 가진 당원들이 탈당하여 좌파당으로 넘어가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였다.

탈당의 행렬은 특히 2004년 이후에 더욱 거세어졌다. 브란트가 총리로 있던 1970년대에는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 명을 넘었고, 슈뢰더 총리 초기만 해도 75만 명이었지만, 2009년 현재 57만 명으로 줄어 지난 10년 동안에 20만여 명이나 당을 떠난 셈이 되었다. 또한 2004년 한 해에만 4만5천 명이 탈당하여 최대 탈당 기록을 세웠다. 시민당의 또 다른 걱정은 당의 노령화이다. 2007년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47%이고 29세 이하의 청년 당원은 6%에 불과하다. 그 결과 시민당은 은퇴자나 연금수령자들의 정당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정당이 젊은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장래를 염려해야 할 이유이다.

그러면 시민당이 이렇게 갑자기 추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시민당 연구자로 유명한 괴팅겐 대학의 프란츠 발터 정치학과 교수는 이러한 추락 현상이 2009년 9월 선거일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미 10여 년 동안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당은 서서히 추락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며 당원들이 떠나고 있는데도, 당 간부와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 번이나 연속 정권을 차지한 데 도취되어 자만에 빠져 버렸다는 것이다.

시민당 집권 11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당원이 탈당하고, 수백만 표가 달아나 버린 초고속 추락의 원인은 결코 유령의 착란이 아니었다고 한다. 발터 교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서 찾았다. 1999년 시민당 집권 이래 10년 동안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인구가 놀랍게도 12%에서 18%로 증가했다. 일하면서도 가난한 빈곤층(working poor)이 슈뢰더 집권 기간에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독일 정치사에서 사회 정의는 시민당의 상표와 같았는데, 대다수 국민이 시민당 집권 기간에 사회 정의가 무시되었다고 평가했다면 당으로서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독일에서 만나본 시민당 국회의원, 전직 장관 그리고 지구당 당원들까지, 추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은 슈뢰더 총리 시절, 특히 2003년에 공표된 경제 개혁 정책인 “아젠다 2010”에 포함된 “하르츠 4”가 주범이라고 성토했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만든 비정규직, 파트타임(시간제 노동), 미니잡 등이 오히려 실업수당을 받던 것보다 못하고, 이들에게 주는 사회보조금은 월 359유로 밖에 안 되어 극빈자층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르츠 개혁안은, 슈뢰더 총리가 2002년 총선을 앞두고 폭스바겐사

회장인 페터 하르츠 박사를 통해 만든 노동시장 개혁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토로 복지 국가를 내내 설파해 온 사민당에게 애초부터 큰 부담이 되는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사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타협하고, 시장 논리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가령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소기업과 수공업에는 해고방지법의 적용을 해제시키고, 신규 기업들에게는 이 법의 적용을 4년간 유예시킴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여 기업측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실업수당의 수혜 기간을 단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액의 사회부조금을 주는 정책을 현대화,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실시함으로써 복지 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제도도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합리화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대신 기업 측에는 법인세를 30~40%에서 25%로 대폭 인하해 주고, 금융 자본과 헤지 펀드의 통제와 규제를 풀어주는 시장 근본주의적 정책을 노골적으로 표방하였다.

사민당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내고 당내 주요 직책을 맡아 온 여성 정치인 헤르타 도이블러-그멜린 교수는 “사민당이 90년대 이래로 세 가지 커다란 실책을 저질렀다”며 필자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첫째는 슈뢰더와 라퐁텐은 둘다 훌륭한 정치가인데,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못하고 분열한 것이 추락한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자기는 두 정치가를 화합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둘째는 통일 후의 정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구동독의 유능한 정치인을 통일 후 사민당이 받아들여야 했는데 법률적, 이념적 문제를 따지며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동독의 지배 정당이었던 사회주의 통일당(SEU)에도 유능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게오르크 기지같이 소련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사회당(PDS)을 세운 정치인을 받아들여 동독 지역 국민들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야 했다며 유감스러워했다. 오히려 보수당인 기민련이 동독의 정치인을 받아들여 앙겔라 메르켈 같은 여성 총리도 배출하고 포용력을 보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세 번째 실패는 전통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했던 가난한 사람들, 즉 소외된 계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사민당이 ‘새로운 중도’ 당이 되어야 한다는 구호와 명분 때문에 하층민들보다는 중상층의 부르주아 계층에 더 집중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퇴직 연금 수령을 67세로 올리려는 정책도 노조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전통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했던 가난한 사람들, 즉 소외된 계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사민당이 ‘새로운 중도’ 당이 되어야 한다는 구호와 명분 때문에 하층민들보다는 중상층의 부르주아 계층에 더 집중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당내 논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아젠다 2010”이 2003년에 가결, 선포되고 하르츠 개혁안이 채택, 실시되자 당의 전 대표이며 좌파 이론가인 라퐁텐이 탈당하고, 많은 좌파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마가렛 대처 수상이 밀어붙인 신자유주의의 강공에 밀려 18년간 야당에 머물러 있던 영국의 노동당에게 ‘제3의 길’ 정책은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다.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 ‘새로운 노동당’을 외치며 서민층을 보호하면서 경쟁력도 높이는 정책을 내걸어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기민련 정부도 사회복지 정책에는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사민당이 오히려 제3의 길을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와 타협하는 정책을 펴 당 내외에서 비판과 반발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다.

슈뢰더 총리는 1998년에 집권하자마자 토니 블레어와 짝이 되어 사회민주주의 색깔을 제3의 길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1999년 6월 8일 런던에서 블레어와 슈뢰더가 공동으로 발표한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나아갈 길”이란 선언문은, 영국이 실험한 ‘제3의 길’ 정책을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확산시켜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강령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

“슈뢰더-블레어 문서”의 핵심은 “새로운 중도”를 기치로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며,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정책이었다. 노동자의 권익 투쟁이나 복지제도는 아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세금 부담을 높게 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곧 이어 사민당의 여러 뿌리 조직들이 ‘제3의 길’을 신자유주의적 노선으로 규정하고,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를 배신하는 길이라고 비판하며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사민당의 원로이며 지도적 이론가인 에르하르트 에플러는 이 선언문을 ‘사민주의의 정통성과 가치에 위배되며, 136년 역사와의 단절’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제3의 길’이 표방한 시장 자유주의적 정책은 마치 자민당(FDP) 문서 같다는 비난과 함께 시장 근본주의에 굴복한 문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내 논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의 토대 위에 만들어진 “아젠다 2010”이 2003년에 가결, 선포되고 하르츠 개혁안이 채택, 실시되자 당의 전 대표이며 좌파 이론가인 라퐁텐이 탈당하고, 많은 좌파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2. 영국 노동당과 ‘제3의 길’의 한계]

그러면 제3의 길을 창안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유럽의 사민주의를 이끌어 가던 토니 블레어의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은 어떻게 되었는가?

2010년 5월 영국의 총선거는 13년간이나 정권을 차지했던 노동당에게

패배를 안겨 주었다. 토니 블레어에 이어 2007년 수상이 된 고든 브라운은 3년 만에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에게 다우닝가 10번지를 넘겨주었다.

1997년 토니 블레어가 당선되었을 때, 노동당은 44%의 득표로 압승했으나 이번에는 29%로 하락했고, 결국 36%를 얻은 보수당은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꾸렸다. 노동당에서 분열된 자유민주당이 23%나 얻어 보수당과 합세한 것은 노동당에게 큰 위협이었다. 독일의 사민당처럼 큰 폭의 추락은 아니지만 전보다 5백만 표를 잃은 노동당은 사실상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구나 1997년에 40만 명이던 노동당 당원이, 12년이 지난 2009년에 16만 명으로 줄었다는 것도 위기의 한 징표였다. 2009년 6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15.3%를 얻고 보수당과 영국 독립당에 이어 3등을 하는 수모를 당하면서 노동당 추락의 전조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면 노동당의 하락과 ‘제3의 길’ 정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다시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서기 위해서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정책은 비판적 평가도 받았지만 대체로 90년대 후반, 당시 영국의 상황에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았다. “새로운 노동당” 정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모두 인기가 있는 상품이었으며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합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나 창의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소외자들을 끌어안은 정책, 제3의 길은 양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묘안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베스트셀러로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는 것과 함께,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케인지안적 국가 간섭주의도 아닌 사잇길인 ‘제3의 길’은 유럽 전역에서 날개 돋친 듯이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길로 전파되었다.

노동당 정권에서 유럽연합 장관을 지냈던 마이크 깁스 의원은 ‘제3의 길’ 정책이 전통적인 노동당 정책과 현대적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요구를 잘 절충한 정책으로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3의 길을 비판하는 좌파 평론가들도 최저 임금제(1만 3천 파운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었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내세운 노동당이 왜 근년에 와서 인기를 잃고 선거에 패배 했을까? 노동당의 여러 의원과 전문 연구원들은 정책이나 이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민층 보호정책을 내세워 놓고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 주택이나 교육, 건강을 개선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동당의 하락과 ‘제3의 길’ 정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다시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서기 위해서도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양당이 모두 중도적인 노선을 취하고 보수당도 사민당 성격의 구호나 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념과 노선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현실적으로 약속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진정성을 가졌는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이 지나치게 관료화되었고 중앙 권력에 집중되어,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이해하고 돌보는 과업을 게을리 한 데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 '제3의 길'을 지적인 문제(Agenda)로만 생각했지 빈곤이나 사회 정의 같은 문제를 정치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거나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보수당 쪽에서도 대처 시대를 반성하며, 경제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정책들을 내놓았고 노동자와 서민층의 표를 유인해 갔다고 한다.

양당이 모두 중도적인 노선을 취하고 보수당도 사민당 성격의 구호나 정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념과 노선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현실적으로 약속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진정성을 가졌는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요즘의 유권자들은 구호나 선전에 속지 않으며, 빈곤층의 복지와 중산층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약은 유권자'(smart voter)라고 한다.

2010년 선거 패배의 원인을 빈곤층과 서민층의 이탈에서 뿐 아니라 중산층과 지식인층의 많은 반발에서 찾으려는 분석도 있다. 특히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로 야기된 세계적 경제위기에 영국도 큰 타격을 입었는데, 노동당이나 사회민주주의가 과연 세계화 시대의 경제위기에 대처할 능력과 처방이 있는 지를 못 믿는 중산층이 오히려 안정을 택해 보수 측에 기울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노동당 정부가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과병을 하고 부시에게 말려든 데 대한 비판 여론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노동당도 독일 사민당의 경우처럼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다렌도르프가 예견한 '사회민주주의의 종말'이 현실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이듯이 노동당 내의 여러 그룹과 정치인들이 혁신의 과제를 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곳곳에 나타났다.

새롭게 선출된 당수 에드 밀레반드의 진보적 지도력에 기대를 거는 여론도 있지만, 중앙당 조직이 독일처럼 강하지 못한 영국 노동당은 여러 개의 싱크탱크와 이익단체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영향도 받는다. 국회의원이나 적극적인 당원들 모두, 여러 갈래의 연구소나 싱크탱크 조직에 연루되어 정책토론을 하면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며 구상하고 있다.

이미 120여년 전 노동당이 창당될 때부터 당 정책과 진로의 추진 세력이 되었던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는 역사 속에 살아남아, 지금도 7천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평등과 통합, 공공사업 예산 축소 문제, 국제 정치, 환경과 기후 변동 등에 관해 부단히 토론하며 정책 대안을

만들어 당과 의회에 보내고 있다.

여러 그룹과 싱크탱크의 성격과 색깔에 따라 현실 분석과 개혁 과제에 대한 처방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토니 블레어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는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변호했다. 한때 유효했지만 이미 용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자신도 2003년부터는 '제3의 길'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당과 사민주의가 찾아야 할 새로운 이정표는 과거처럼 노조나 계급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며,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계층과 이익단체의 요구와 정서를 수용하고, 사회적-자유주의적(social-liberal)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폭넓은(Big Tent)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좌파 싱크탱크인 '컴퍼스(Compass)'의 닐 로손 사무총장은 블레어의 '제3의 길'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굴복한 정책이어서 학교와 병원을 상업화하고, 주택, 금융, 노동을 시장에 맡겨버림으로써 빈부격차와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이 다시 재기하려면 잃어버린 전통적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빈곤층을 구제하고 사회가 시장을 통제하여 모두가 잘 사는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대안적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노동당의 진로와 혁신 방향은 아마도 정책 네트워크와 컴퍼스, 페이비언 협회 등 여러 싱크탱크 단체의 논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노동당이 다시 재기하려면
잃어버린 전통적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빈곤층을 구제하고 사회가
시장을 통제하여 모두가 잘 사는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대안적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3. 프랑스의 사회당과 좌파 연합]

독일과 비슷하게 프랑스의 사회당(Parti Socialiste)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락의 길을 걷고 있고 정체성에 관한 혼란과 위기의식을 안고 있다. 슈뢰더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집권당이며 리오넬 조스팽(1997~2002)이 이끌던 사회당은 '제3의 길'이란 구호는 안 썼지만 민영화라든가 탈규제 정책 등 유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채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좌파의 분열과 노조나 하층민의 이탈로 인해 선거에서 참패했다. 조스팽 시절 사회당은 보수당 집권 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사회당이 한창 잘 나가던 1988년, 프랑수와 미테랑은 대통령 선거에서

영국과 독일의 상황과 다른 프랑스에서, 특히 오랜 사회주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장에서 사회주의를 당명으로 내걸고 있는 사회당이 급격히 추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노동자층에서만 43%, 사무직 중산층에선 45%의 지지를 얻어 압승했지만, 14년이 지난 2002년 선거에서 조스팽은 노동자층에서 12%, 사무직에서 13%를 얻어, 30%의 지지 세력이 사회당을 떠나는 참패를 겪었다. 사회당은 2008년 선거에서 이를 만회하려고 했지만, 로얄 후보는 1차 선거에서 겨우 28%를 얻었고, 드골의 공화당을 계승해 시라크가 세운 보수당인 대중연합운동당(UMP)의 사르코지에게 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2009년 유럽연합 선거에선 16% 득표에 그쳐, 사회당이 몰락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영국과 독일의 상황과 다른 프랑스에서, 특히 오랜 사회주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장에서 사회주의를 당명으로 내걸고 있는 사회당이 급격히 추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사회당 간부이며 당 현대화 위원장인 아르노 몽테부르 의원은 이에 대해 세 가지 원인을 지적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노선과 타협하고 절충한 것이고, 둘째는 좌파 정당들이 여러 개로 갈라진 것인데 이들이 잘 연합했다면 15%를 더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셋째는 당이 노령화하여 젊은 세대를 영입하지 못하고 현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충분히 좌파적이지도, 충분히 현대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당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선 사회당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권위주의와 엘리트 의식을 없애야 하고 당의 얼굴과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계몽되고 깨어나서 기대에 어긋나면 아무리 역사와 전통이 있더라도 쉽게 등을 돌린다는 것이다. 그가 맡은 당 현대화 위원회는 당 혁신 위원회와 같은 의미라고 한다. 당이 사회에 뿌리를 박으려면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와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당의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후보를 선출하는 데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당은 옛날 아젠다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문제, 임금과 구매력의 문제, 경제와 생태 환경의 문제, 국가 채무를 감소시키는 과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선거제도는 독특해서 여러 정당 후보자가 1차 투표부터 연합 공천을 하지 않고, 2차 결선 투표에 가서 짝을 지어 연합 후보를 내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랑스 사회당에겐 2차 투표에 가서 여러 갈래의 좌파 정당을 연합시키는 전략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2차 대선 후 한때는 공산당이 20%대의 득표율을 보인적도 있다. 1981년에도 미테랑은 대통령이 되면서 선거연합에 공이 있는 공산당에게 네 개 부처의 장관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 유럽이 무너진 오늘날에는 공산당이 겨우 3~4%의 지지를 받는 군소 정당일 뿐이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아직 공산당 말고도 의회에 진출 못하는 여러 개의 좌파 정당이 있다. 막시스트 정당, 트롯츠키스트 정당, 반자본주의 정당 등이다. 별로 영향력이 없는 군소 정당들이지만 모두 합하면 15~16%나 되기 때문에, 사회당으로선 2차 투표에서 이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전략이다. 물론 점차 10%대로 득세하고 있는 녹색당과의 연대와 다른 중도 우파 정당과의 연대도 무시할 수 없다.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득실대고 있고 보수 우파 정당들이 친 서민 정책으로 전략을 바꾸는 상황에서, 프랑스 사회당은 정체성과 진로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제3의 길'이나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은 정책과 대안이 될 수 없다. 복지국가 정책을 희생시키는 정당은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노조나 노동자, 서민층의 요구만 반영할 수도 없다. 조스팽 사회당 정부(1997~2002)가 내놓은 실업 극복 대책은 주당 35시간 노동제였지만, 프랑스 노동자들은 오히려 드골과의 시라크나 우익 포퓰리스트인 르 팡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이는 유권자들이 이념보다는 실용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정당을 쉽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프랑스 사회당은 노동자 당이 아니라는 평을 듣고 있다. 1905년에 여러 개의 좌파 정당을 통합해 창당한 사회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칼 카우츠키의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을 택해 왔기 때문에 초기부터 극단적인 노조 운동과는 분리되어 있었다. 복수 노조가 허용된 프랑스에는 이념과 색깔이 다른 여러 개의 노조가 있어 조직적인 연대를 하기도 어렵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회당의 당원 20만 명 중 노동자가 5%를 넘지 못한다. 노동자의 인구 분포는 27.8%이지만 당원의 66%가 대학 졸업자이고 59%가 교사나 공무원, 문화인인 인텔리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 소시민층, 지식인층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출발한 사회당이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와 하층민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중산층의 지지폭도 넓혀지지 않는 형편이다. 이제 다시금 서민층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경제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하층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정책과 전략이 있어야 하며, 분열된 좌파 정당들을 연합시키면서 녹색당이나 중도 우파의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호소력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 과제일 것 같다.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에서
출발한 사회당이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와 하층민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4. 스웨덴의 사회민주당과 노조 문제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 모델로 회자되는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집권 여당으로 자리 잡아 온 사회민주당(SAP)은 2006년 선거에서 집권에 실패하고 나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2002년 총선에서 39.8%를 얻었던 사민당이 4년 뒤에는 지지율이 35%로 떨어졌지만 제1당의 자리는 지켰기 때문에 독일처럼 대 추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보수 성향의 온건당(MP)이 26%의 표를 얻어 2등을 했지만, 자유당(7.5%), 기독교민주당(6.6%), 그리고 농민의 당으로 불리는 중도당(7.9%)과 함께 4당 연합 정부를 만들어 집권에 성공한 반면, 사민당은 녹색당(5.2%)과 좌파당(5.8%)과의 연정에 실패해 야당으로 밀려났다는 데 있다.

2010년 9월 19일 총선에서는, 모나 살린 여성 당수가 이끄는 사민당이 이번에는 녹색당, 좌파당과 미리 연정 계약을 맺고 정권을 되찾으려 애썼으나, 4당 연합 정치에 성공해 인기가 올라간 프레드릭 레인펠트 총리가 이끄는 보수 측에 또다시 패했다. 이번에는 이민 정책에 반대해 온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SD)까지 4%의 장벽을 넘어 의회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보수층은 더 강화되고 사민당은 더욱더 위축되었다.

1932년 이후 줄곧 정권을 장악해 온 사회민주당은 1976~82년과 1991~94년에 두 번의 짧은 기간에 중도 우파 정당에게 정권을 넘겨 주었지만, 우파 정당들이 통치 능력이 없어 사민당이 곧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 정당의 연합 전선에 연속으로 패하자 이제 스웨덴도 사회민주당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무엇보다 복지 국가임을 국가 브랜드로 자랑해 온 스웨덴이 복지 정책의 설계자요 기관차였던 사민당을 실각시켰다는 것은,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사회민주주의가 걱정해야 하는 위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이 변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사민당의 득표율이 하락하고 지지도가 떨어진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요란 페르손의 사민당 정부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집권 하면서 스웨덴에 불어 닥친 금융·경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실업자 대책과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고임금 정책을 쓰면서 생산력과 이윤이 낮은 산업 부문을 살리지 못하고 소멸시켜 버렸으며, 세계화 시대의 경제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복지 국가임을 국가 브랜드로 자랑해 온 스웨덴이 복지 정책의 설계자요 기관차였던 사민당을 실각시켰다는 것은,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사회민주주의가 걱정해야 하는 위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민당 정부는 이미 경제성장을 위해 80년대부터 서서히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와 복지제도를 탈규제화하는 '제3의 길' 정책을 펴 나갔다.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공동체주의 때문에 노동조합과도 점차 사이가 벌어졌고, 중도 우파의 지지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조와 좌파 세력을 거세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원래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880년대 아우구스트 팔름 등이 독일의 노동조합 운동과 고타 강령에 영향을 받아 창당 때부터 노조가 중심 세력으로 조직된 정당이다. 대부분당원이 노동조합원이고 사민당 국회의원의 40% 정도가 전통적으로 노조 출신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펠트(Feldt) 사민당 정권이 위기 해소책으로 임금과 가격 동결을 법제화하고 노동 운동과 투쟁 방법을 제한하자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마침내 노조원이 집단으로 자동 당원이 되던 제도가 폐지되고 사민 당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노조 세력이 당을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당이 노조를 소외시킨 꼴이 되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사민당도 점차 노동자 당에서 중산층, 지식인층의 당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친서민 정책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보수측 연정에 성공한 온건당의 레인펠트 총리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노동자 계층과 서민 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새로운 보수당"을 구호로 내세우고 감세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신자유주의라는 비난을 벗고, 사민당의 간판 정책이던 노동자들의 고용과 일자리 만들기를 더욱 진지하게 정책에 반영해서 사민당에 실망한 서민들의 표 모으기에 성공한 것이다.

2006년 선거에서 레인펠트는 보수 정당인 온건당이 오히려 '노동자 정당' 이라고 외치며 사민당보다 복지 정책에서 앞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2010년 총선에서도 승리한 것을 보면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층에서도 계속 신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보수측의 여러 군소 정당을 묶어 정책 연대와 연정을 성공시킨 지도자의 인물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도시 중산층과 노동자 서민계층이 등을 돌리고, 보수 정객들이 복지와 고용 정책을 들고 나와 사회민주당의 표를 앗아가는 스웨덴의 현상은 스웨덴뿐 아니라 유럽의 사민주의가 당면한 공통된 문제이며,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민당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칼 탐 전 주독일 대사는 심각하게 말했다.

올라프 팔메 전 총리의 언론 보좌관이던 크리스터 이작손은,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서민층,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사민당도 점차 노동자 당에서 중산층, 지식인층의 당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친서민 정책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비전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당은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정당들이 다 중산층을 겨냥하고 서민복지를 이야기 한다면 시민당의 존립 근거는 어디에 있겠냐며 걱정했다.

중도우파 보수정당연합과 맞서기 위해서는 녹색당과 좌파당의 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 정책 등 양당의 정책들이 타협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민당이 어떻게 정책 연대와 선거 연합을 해 나가느냐도 문제이다. 특히 과거 공산당이었던 좌파당은, 독일의 좌파당(Linke)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그들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용하려는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가 풀어야 할 커다란 문제이다.

5. 사회 민주당의 혁신 과제

독일 시민당은, 11월 드레스덴에서 긴급 당 대회를 열어 크게 반성했다. 당의 정책과 조직 면에서 일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중 정당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혁신 의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2009년 9월 총선에서 일대 추락을 경험한 독일 시민당은, 11월 드레스덴에서 긴급 당 대회를 열어 크게 반성했다. 당의 정책과 조직 면에서 일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중 정당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혁신 의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당 대회는 2010년과 2011년, 2년간을 혁신 과제를 찾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광범위한 정책 토론과 함께 위로부터 아래까지 여러 수준과 단계에서 의사소통과 의견 교환의 과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결의했다.

인터넷에 당 개혁을 위한 '미래 작업실(Zukunftswerkstatt)' 을 설치하여 각종 비판과 의견들을 모으고, 폭넓고 심층적인 담론을 2년간 진행시킨 뒤 2011년 가을 당 대회에서 개혁 방향과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 조직의 바깥에 전체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대화나 토론하는 마당을 열어 놓겠다는 뜻으로 설치된 '미래 작업실' 에는 '경제와 노동', '편안하고 좋은 삶', '민주주의와 자유', '교육제도', '가족과 자녀', '사회통합' 등 개혁의 방향을 논의할 6개 토론방을 만들었다.

2010년 9월 베를린에서 모인 특별 당 대회에서는 '공정한 독일 사회' 를 주제로 내세우고 수집된 여론을 토대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제시 되었다. 경제성장과 분배의 새롭고 공정한 모델을 찾기 위해 '최저 임금을 시간당 8.50유로로 할 것', '비정규 노동을 제한할 것', '20만 장기 실업자들을 우선 고용할 것' 등 구체적 방안들이 나왔다.

투기 금융자본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토빈세와 유사한 금융거래세의 도입도 논의했고, 공정한 세제 확립을 위해 재산수익세를 25%로, 소득세

상한을 현재 42%에서 49%로 높여 복지 기금에 충당하는 정책도 채택했다.

사회민주당이 실패한 원인과 혁신의 과제를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찾아보기 위하여 “좋은 사회 만들기(Building good society)”라는 웹 사이트 토론장을 만들고 유럽 각국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의 비판과 여론을 모아 참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또한 유럽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민주당이 앞장서 공정한 경제, 안정된 일자리, 지속가능한 발전, 자본주의 개혁, 정당 조직의 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많은 개혁 과제와 정책 제안을 토론장을 통해 수집, 정리하고 있다.

사민당의 평론가인 힐레브란트는 이렇게 주장했다. “진보 정치는 이제 소득과 부의 분배 정의를 위해 다시금 노력해야 한다. 진보 정치란, 사회 정책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 정의를 통해 빈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치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와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과 간섭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가 활성화해야 한다.”

유럽의 9개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최근 선거 결과를 9명의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사회경제학자 알프레드 팔러 박사는 지난 몇 해 동안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극적인 하락을 겪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세계화와 후기 산업 지식경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통합의 문제에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할 경우 사회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폐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회 민주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본주의를 바르게 길들이고 인간의 참된 삶과 사회정의를 보장하려면, 근원적인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 1) 노동시장에 굴복하여 값싼 노동시장과 양극화를 만드는 제3의 길을 시정하고, 경제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 속에서도 사회 통합과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2)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 생산성이 높은 경제로 발전하려면 노동의 질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주변부 이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학령 전후의 교육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 3)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생활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시민사회 운동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하고 시민들이 당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막연한 ‘사회 정의’, ‘인권’, ‘연대’ 등의 구호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갖는 정치 불신과 신뢰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체적 전략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당에 대해

사회 민주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본주의를 바르게 길들이고 인간의 참된 삶과 사회정의를 보장하려면, 근원적인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였다.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적 언론과 의사소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민주당이 근본적 혁신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대중 정당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며 사회 민주주의의 르네상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 필자는 인터뷰에 응해 주신 독일의 헤르타 도이블러-그멜린(Herta Daeubler-Gmelin) 교수, 영국의 마이크 갱스(Mike Gaps) 의원, 프랑스의 아르노 몽테부르(Arnaud Montebourg) 의원과 스웨덴의 칼 탐(Carl Tham) 전 주독일 대사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발 행 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 집 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 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feskorea@fes.or.kr

http://www.fes.or.kr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1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